

신기후체제를 새로운 성장기회로 활용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박주헌



파리 기후변화 당사국총회에서 각국 정상들은 선진국만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했던 교토의정서를 대체하고 2021년부터 모든 국가가 감축에 참여하도록 하는 파리협정을 체결하였다. 신기후체제의 핵심은 EU국가를 비롯한 일부 선진국들만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던 기존의 교토의정서 체제와 달리 감축의무가 세계 모든 국가에게 적용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교토체제에서는 개도국으로 인정받으면 감축의무를 피할 수도 있는 피난처가 있었지만, 신기후체제 하에서 세계 모든 국가는 감축 부담의 차이는 있겠지만 예외 없이 저탄소경제로 상징되는 신기후체제에 적응해야 하는 것이다.

실제로 현재 기후변화 당사국의 약 75%에 해당하는 162개국은 파리 총회가 열리기 전에 이미 각자의 감축방안을 제출하여 파리합의의 기반을 조성한 바 있다.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BAU 대비 37% 줄이는 방안을 제출하였다. 우리나라가 제시한 감축목표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다소비업종 중심 산업구조, 현재의 에너지효율 수준 등을 감안할 때 달성성이 결코 높지 않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절대 배출량과 배출원단위의 추세를 분석한 결과, 우리의 감축목표는 추세선을 크게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실가스를 줄여나가면 결코 도달할 수 없고, 경로파괴적(path-breaking) 특단의 정책이 필요한 수준이라는 의미다.

그러면 신기후체제는 우리 경제에 부담인가 기회인가? 흔히 신기후체제는 탄소경제에서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을 강요하지만 조금만 시각을 달리하면 꼭 부담이 아닌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신기후체제 출범은 화석에너지 시대의 종말을 앞당기는 세계사적 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 화석에너지 시대 이후는 아마도 기술에너지 시대가 될 공산이 크다. 화석에너지는 만들어낼 수 없지만, 기술에너지는 기술개발에 따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는 있다. 따라서 블루오션인 에너지 신기술 시장을 선점하면 신기후체제로의 진입이 오히려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약 20조원을 투자해 2030년까지 총 100조원 규모의 에너지 신시장을 구축하겠다는 '2030년 에너지신산업 확산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에너지 신산업은 말 그대로 새로운 산업의 영역으로, 당장에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 또한 직시해야 한다. 따라서 에너지 신산업은 단기정책과 중장기정책으로 구분하여 두 개의 트랙으로 육성될 필요가 있다. 당장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분야는 다양한 지원수단을 모색하는 단기정책과제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시장에서 자생할 수 있는 시장여건 조성이 정책과제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한국은 2012년 이후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출범,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을 유치한 국가다. 지난 10월에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의장도 배출했다. 기후변화 선진국을 자부해도 무방하다고 할 수 있다. 1990년 이후 22년간 EU는 국내총생산(GDP)을 약 45% 성장시키면서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약 19% 줄이는 등 저탄소경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한국도 기술개발, 인프라 투자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신기후체제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